

5·18 왜곡 대응 한계… “국가 차원 전담 기구 세워야”

중소쇼핑몰서 ‘전두환 티셔츠’ 판매 ‘오월광주’ 유혈진압 후 사진 담겨 국내언론·SNS 등서도 지속 반복돼 당사자 “강력한 처벌·제도 마련을” ‘감시·고발’ 통합 수행할 조직 필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전두환씨 얼굴이 새겨진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일부 극우 성향 매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허위 보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5·18을 향한 모욕과 폄훼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대응 기구의 설립과 함께 예산 및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5·18 관련 단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왜곡 행위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바바(중국 IT그룹)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가방 등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로고를



타오바오에서 판매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새겨진 반팔 티셔츠. 타오바오 캡처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문구와 함께 전두환의 얼굴을 넣은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관련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가방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싱가포르에 판매점을 둔 사업자는 해당 가방을 ‘창의적인 캔버스 백’으로 소개하며 약 1만5000원의 가격에 판매했고, 5·18기념재단은 즉

각 공문을 발송해 해당 가방의 판매 금지와 관련 규정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시민 학살을 자행한 전씨를 미화하거나 5·18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언론과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드 일리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 이 매체는 오월 단체와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직면했고, 결국 지난 16일 자 신문 1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하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화쟁이 시민폭동이 아닌 시민의거임을 인정한다.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았지만, 이 같은 왜곡과 폄훼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당사자와 유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27 전남도청 최후 항쟁자 이양현(75)씨는 “그날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왜곡된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은 물론,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해 국민과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심정이다.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제보, 한층 강화된 법안 마련을 통해 왜곡·폄훼 행위를 엄벌하고,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에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5·18 왜곡 제보가 370여건 접수됐다. 재단은 시민 서포터즈인 ‘오월메이

트’ 등 다양한 제보·대응 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AI모니터링을 통해 왜곡·폄훼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 등과 협력해, 사안에 따라 게시글 삭제 요청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타오바오 등 해외 플랫폼의 5·18 회화화 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오월정신 훼손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왜곡 콘텐츠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와 법률 검토 및 삭제 요청, 고발 조치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AI 기반 모니터링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적·외교적 역량을 갖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일회성 대응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반복되는 왜곡을 막을 수 없다”며 “상설 기구를 중심으로 신속 수사 및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제도적 장치와 실행력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금호타이어 근로자들, 사측에 “생계 대책·책임자 처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에 공장 화재로 피해가 우려되는 노동자·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안전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이번 화재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장 화재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돼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문제가 거론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한 소비 축소와 골목상권 피해도 지역경제 전반 침체와 쇠퇴

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노조 또한 사측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측은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유관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광주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서 분진과 가스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책임성 있는 피해 조사와 합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은 노동자들의 고

용·생활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장 완전 정상화에는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2500여명의 고용과 생계가 역대 최악인 만큼 신속·안전한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피 도중 20대 직원 1명이 추락해 척추뼈 골절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소방대원 2명도 진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정준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한달간 살수차 운영

아파트 놀이터 등 청소봉사도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한달간 소촌, 송정, 선운, 도산 등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운영한다. 일대를 순회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분진 등을 세척하는 작업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달간 쉬는 날없이 운영하며 시운행 후 증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 아파트 내 놀



이터 등 청소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5·18 주간’ 광주 대중교통 무료 65만명 이용

최근 한달 주말 대비 27% 증가 외지 방문객·장애인 배려 호평

광주광역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인 17~18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 결과, 총 65만명이 이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달 주말 평균(4월19일~5월11일 51만명)보다 26.8%가 증가한 수치다. 교통수단별로는 △시내버스 53만명 △도시철도 11만명 △장애인콜택시 4000명으로, 각각 전월 대비 24%, 43%, 27% 증가했다.

특히 전야제가 열린 17일에는 37만명이 이용해 18일 28만명보다 더 많은 시민

과 방문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남로 4가역에서 1만110명, 문화전당역에서 8745명이 이용,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 참석자와 5·18민주광장 탐방객들이 도시철도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8일 하룻동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 운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이를 17~18일 이틀로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까지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배려한 실질적 복지정책을 실현했다.

또 지난해 미흡했던 사전 홍보를 보완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광주의 주요 관문과 시내버스 내부, 도시철도 역사, SNS 등을 통해 적극 안내

를 진행했다.

SNS에서도 ‘5·18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조치’, ‘광주 방문객에 대한 배려 정책’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한 시민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5·18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5·18정신을 시민과 함께 계승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광주 G-패스’ 등 교통복지 향상 정책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피해보상 로드맵 밝혀야”

광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피해보상 로드맵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입장을 내고 “보상의 범위, 절차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반적인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가 집을 나와 대피 시설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며 “집, 자동차 등 화재 현장에서 나온 연기와 낙하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호타이어는 시민이 겪는 불편과 제기하는 요구에 정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 로드맵과 조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민들이 있는 대피 시설에 운영 인력을 보내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에 두려웠을 인근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을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실의에 빠진 금호타이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화재 진화를 위해 힘써준 소방대원, 경찰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